

야권 장악 대격돌... 과열 · 혼탁지역 지정

4.13 총선 격전지 최종 점검 · 김제부안 · 남원임실순창 · 완주진무장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11일 현재까지 전북지역 선거구 대다수는 혼전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야권 장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치 물러섬 없이 배수진을 치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남원임실순창 지역과 김제부안, 완주진안장수무주 등 3개 선거구를 제4차 과열 혼탁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본보는 이들 선거구와 전주갑을병 선거구 등 총 6개 지역을 2차례에 걸쳐 심층 분석해본다.

완주무진장, 안호영 · 임정엽 한 치 양보없는 팽팽한 경쟁

남임순, 박희승 · 강동원 등 절대적 우위 장담 어려워

김제부안, 김춘진 · 김중희 여론조사결과마다 순위 뒤바뀌어

도내 총선 격전지의 경쟁 후보자들

<완주진무장>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무장

19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더민주 안호영 후보와 완주군수 출신의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가 한 치 양보없는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완주군과 진안무주장수는 생활문화권이 사뭇 다른데다 이 지역이 한 개의 선거구로 묶여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안 후보 고향이 진안이다 보니 해당 지역 지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2번의 완주군수를 역임한 임 후보 역시 완주에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임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네가티브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안 후보와 임 후보의 지지자라 선거운동원들이 유세차량 위치를 문제 삼으며 서로

뽀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임 후보 측이 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과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하는 등 법정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도내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뛰고 있는 남원 임실순창 역시 혼전양상이다. 새누리당 김용호(38), 더불어민주당 박희승(52), 국민의당 이용호(56), 민주당 임종천(47), 민중연합당 오은미(47), 무소속 오철기(47), 무소속 강동원(63), 무소속 방경채(59) 등 8명이 표밭을 누리고 있다. 현역인 강동원 후보와 박희승 후보, 이용호 후보 간 다자구도가 형성한 가운데 특정 후

보의 절대적 우위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변호사 출신 새누리당 김용호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생활정치를 강조하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국무총리 공보처서관을 지낸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는 국정호 순환도리를 개선하고 성수산 산림휴양지 개발 임실 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19대 총선에서 이강래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강동원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낙하산 공천을 비난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8.9대 전북도 의원을 지낸 민중연합당 오은

미 후보는 여성과 농민 순창을 지지 기반으로 표밭같이 나서고 있다. 유권자 수는 남원이 7만145명, 임실 2만5,864명, 순창 2만5,294명이다. ▲김제부안 김제 · 부안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와 국민의당 김중희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순위가 뒤집힐 만큼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선에 도전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치의학 박사 출신 정치인이고 김중희 국민의당 후보는 한의사 출신 정치인이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베라에 의뢰

해 지난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춘진 후보가 35.7%의 지지율로 31.0%를 기록한 김중희 후보와 4.7%p차로 앞섰다. 지난달 30일 전주MBC와 JTV전주방송, 전북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발표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발표된 결과에서는 김중희 후보가 35.7%의 지지율로 김춘진 후보(34.6%)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두 후보 간의 경쟁은 선거 막판까지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별취재반

4.13 선거 RUN · RUN · RUN

장세환 후보 "박 대통령 총선개입 탄핵사유"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전주 을)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주 방문은 부당한 총선개입으로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장 후보는 "투표일을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대통령의 전주방문은 총선에 개입하여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총선이라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대통령의 사례에 비추어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주방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임이 분명하다"며 "박근혜대통령은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법 9조 제1항에 명시된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예로 들며 "(박 대통령의 행위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김춘진 후보 "폭행 가해자 처벌의사 없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김제·부안)는 8일 발생한 폭행피해사건에 대해 폭행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없다는 등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 김 후보는 오전 죽산면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날벼락으로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를 발견하고 휴대폰 등으로 증거자료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 후보가 촬영한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김 후보를 폭행한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는 즉시 김제 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했다. 김 후보는 "차량등원 등 불법사건투표행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후보자폭행 피해 사건과 불법사건투표의 연루여부에 대해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어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며 "4.13 총선승리를 위해 부연히 일어나 다시 선거운동에 매진하겠다"고 선거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김효실, 김중희, 강상구후보에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각종 악습과 불법선거행위와 결별하고 클린선거를 치르는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반기워요 문재인"

지난 9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제20대 총선 정읍 · 고창선거구에 출마한 허정영 후보의 지원유세차 정읍을 방문했다. 정읍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에 2000여명의 인파가 몰려 문 전 대표를 환영했다. 문 전 대표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두건 쓴 어린이를 안아 들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 왼쪽). 또한 같은 날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저출산 · 저성장 해법, 바로 성평등'

더민주 전북도당, 여성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전주 중남문 광장 소녀의상 앞에서 저출산·저성장 해법, 바로 성평등입니다 라는 주제로 4.13 총선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춘진, 김은덕, 최영재, 김성주, 허정영 후보 배우자들과, 최은희 도의원, 오정화, 서선희, 이경신 전주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7대 주요공약으로 △남녀 함께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건설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조성 △일·가족·생활의 균형 실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 강화 △여성능력인권의 권리와 복지 확충 △100% 국가책임 보육 · 교육 반드시 실천할 것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성차별 · 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현 월 통상임금의 40% 이상 인상, 한부모 · 조손가족 지원 강화, 가정폭력 초기 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도우미 쿠폰제 도입, 여성능력인권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 민·노·2세대 영아 보육료 및 민8~5세 어린이집 누리과

정 만 0~5세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 부담을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지위 이용 선거운동 도의원 고발 전북도의회 A 도의원이 특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정 후보측은 "문자 발송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일 도의회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매우 중대한 일이다. B 의원은 공직재산의 이용 범위와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부안서 김제부안 후보자 측 유권자 음식 제공 수사

김제 · 부안의 한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부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안경찰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부안선관위와 부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안을 한정식 식당에서 점심 식사비 30여 만원의 기부행위에 대한 김제 · 부안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대책기구 총괄본부장인 A 전 의원과 B 전 부안군의회의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선배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는 권유가 있어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신고자를 포함한 이는 사람 4명, A전 국회의원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 김제 · 부안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조사원인 B 전 부안

군의회의원 자리에 합석해 후보자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것. 이후 김제 · 부안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식사자리에 들어와 일행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밥값을 계산하려 하자 식사자리를 마련한 E 선배가 그냥 나가면 된다고 해 선관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안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비 결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의 여건된 진술 뿐 아니라 상이한 주장도 하고 있어 부안경찰에 수사자료통보로 공문을 접수해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경찰서는 지난 8일 부안선관위로부터 수사자료통보로 공문이 접수되어 9일 신고자 C 씨를 불러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선거법에 의해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익산선관위, 인쇄물 배포 고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감사예배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지난 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했다. 익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자원봉사자 A씨와 00교회 장로인 B씨 등

2명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감사예배를 공동 기획하고 감사예배에 후보자 C씨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의 목사 10명을 포함한 신도 등 80여명과 함께 후보자 C씨의 선거구호를 외치고 후보자 C씨의 공약과 경력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제작 배부했다. /특별취재반